



# 국제 농업 정보(2020. 6.): 유럽

## 유럽 농업·농촌·식품 동향

### 1 공동농업정책 개혁안과 그린딜(Green Deal)<sup>1)</sup>

- EU집행위원회가 2018년 6월 발표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△유연하고, △결과 지향적이며, △지역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, 그린딜이 추구하는 바와 유사한 점은 다음과 같음.
  - 그린딜이란 2050년 탄소중립국가를 달성하면서도 자원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제사회로 변혁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임.
  - 개혁안은 기후변화 대응, 자연자원 관리 개선, 공정한 수준의 농업인 소득 확보, 생물다양성 보호 강화를 추구하고 있음.
  - EU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수립한 전략계획이 환경적 목표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승인할 수 있음. 조건성, 환경계획(의무규정에서 제시하는 수준 이상을 달성한 농업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) 등 지속가능한 생산 방식을 촉진하는 수단이 포함되어 있음.
  - 농촌개발프로그램에는 활발한 지식 교류와 광대역 통신망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, 제2축 예산의 최소 30%는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것임.
  - 또한, 공급체인에서 구매력 재조정과 식품 및 보건 관련 목표(예: 식품 안전성, 식품 손실, 동물 복지)도 설정함. 예를 들어, 농업인이 생산자조직에 가입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유통과정에서 농업인의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음.
  
- EU집행위원회는 앞으로도 공동농업정책이 그린딜과 양립하기 위해서는 후퇴금지 원칙을 준수하고, 환경계획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함. 구체적으로는 △전략계획 승인과정에서 투명성 강화, △EU집행위원회-회원국 간 대화 채널 구축, △소득지원책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, △생산부터 소비까지 공급체인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제안함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0.5.25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1)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“The CAP reform’s compatibility with the Green Deal’s ambition”(2020.5.20.)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ec.europa.eu/info/news/>).



## 국제 농업 정보(2020. 6.): 유럽

### 2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' 제안서 내용 등<sup>2)</sup>

#### □ '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' 제안서 내용<sup>3)</sup>

- **[필요성]**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위기를 경험하면서 견고하고 회복력 있는 농식품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.
  - 나아가 도시화에도 불구하고 유통거리가 짧은 식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으며, 농식품분야는 기후목표(2050년 기후 중립) 달성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.
- **[정책 방안]** 농식품 공급체인은 소비자·생산자·기후변화·환경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음.
  - **(지속가능한 식품생산)** △녹색 비즈니스 모델<sup>4)</sup>, △순환 바이오 경제<sup>5)</sup>, △통합 병해충 관리(IPM) 강화, △통합 양분관리 실행계획 수립, △항생제 사용 감소, △동물복지 개선, △식물 종 다양성 확보, △유기농업 장려, △CAP에서 환경계획 예산 확보, △농업인의 사회적 지위 개선 등
  - **(식량안보)** △위기관리대책(컨틴전시 플랜) 수립, △위기유보금 재정비
  - **(지속가능한 제조업·도소매업·외식산업·서비스 산업)** △책임감 있는 사업 및 마케팅을 위한 행동 규범 수립, △유통과정에서 손실되는 식품 활용, △환경친화적 식품 포장, △지리적 표시제 등 유통 기준 개선, △유통거리 단축
  - **(지속가능한 식품 소비)** △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(라벨링 등 활용), △환경적 비용 고려한 조세체계 개편
  - **(식품손실과 음식물 쓰레기 감축)** △2030년까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50% 감소, △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측정법 사용
  - **(식품사기 방지)** △무관용 원칙, △기관 간 데이터 공유
- **[변화 촉진 정책]** 지속가능한 농식품 시스템으로 변화를 촉진하는 연구, 혁신, 자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.

2) EU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"A Farm to Fork Strategy for a fair, healthy and environmentally-friendly food system"(2020.5.20.), [CORDIS 홈페이지](https://ec.europa.eu/food/strategy/priorities-2019-2024/european-green-deal)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.

3) (<https://ec.europa.eu/info/strategy/priorities-2019-2024/european-green-deal>)

4)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인 농업인은 탄소 시장에서(혹은 CAP을 통해)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함.

5) 바이오 비료, 단백질 사료, 바이오에너지, 생화학 분야는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함.



## 국제 농업 정보(2020. 6.): 유럽

- (연구, 혁신, 기술, 투자) △전략계획에서 '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을 위한 혁신 네트워크(EIP-AGRI)'의 역할 강화<sup>6)</sup>, △유럽지역개발펀드(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, ERDF) 통해 농식품 공급체인 혁신에 투자, △농촌에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강화
- (자문서비스, 데이터 및 지식 공유, 기술) △효과적인 농업지식혁신시스템(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s) 구축, △농가 지속성 데이터 네트워크(Farm Sustainability Data Network)<sup>7)</sup> 수립

### □ IoF2020 프로젝트 개요<sup>8)</sup>

- IoF2020(Internet of Food & Farm)는 식량안보,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, 농식품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를 활용하고자 만들어진 프로젝트임. FIWARE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술을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.
  - Horizon 2020<sup>9)</sup>의 일환으로 EU집행위원회로부터 3,0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으며(전체 예산은 3,400만 유로), 프로젝트 기간은 2017.1.1.~2020.12.31.임.
  - 와게닝겐 대학이 주도하고 있으며 100개가 넘는 회원(기술 제공자, 소프트웨어 회사, 학계 등)이 파트너로 협력하고 있음.
- 5가지 카테고리(작물, 유제품, 과일, 축산, 채소)로 분류 가능한 33개의 활용 사례들을 포함함.
  - 예를 들어 데이터 기반 감자 생산, 축산물 유통 투명성 및 이력추적성, 신선 포도 생산·유통 등이 있음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0.6.1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6) EIP-AGRI는 농업인과의 교감을 통한 상향식 혁신 방식을 따르며, 연구자-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음.

7) 농업인이 스마트폰 앱이나 PC를 통해 농지에 관한 정보를 얻고, 경제·환경적 측면에서 최적화된 비료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함.

8) (<https://cordis.europa.eu/project/id/731884/results>)

9) 유럽연합이 2013년 수립한 과학기술 연구 및 혁신을 위한 R&D 투자전략임. 3대 중점과제는 우수과학 육성, 산업적 리더십 강화, 사회적 현안 해결임.



## 국제 농업 정보(2020. 6.): 유럽

### 3 EU 농업정책과 기후변화<sup>10)</sup>

- 2019년 12월 EU 의회에서는 현재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에 있어 응급사태에 직면했다고 발표했으며, 농업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크게 기여하고 있음.
  -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(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),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공동연구센터(Joint Research Center) 등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면적 당 생산량, 생육기, 물 이용가능성, 생물다양성, 서식지에 영향을 미침.
  -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으며,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에 비해 기후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.
- EU집행위원회는 농업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10%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공동농업정책 개혁안(2018년 6월 발표)에서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높였음.
- 그린딜(Green Deal)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(탄소순배출이 '0'인 상태)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워, 이에 따른 다양한 기후변화 완화·대응책이 설계되었음.
- 한편 공동농업정책이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 보고서들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.
  - 상당수의 조치들이 강제성이 없으며 기후변화와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있음. 기후변화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나 환경적 조치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음(예: 생태집중지역, 상호 의무준수, 유기농업, LEADER 등).
  - 공동농업정책 내에서 일관성이 떨어져 적절히 대응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많음.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늘리면 오히려 탄소흡수원이 감소할 수 있음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0.6.8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10) EU 의회에서 발표한 "EU agricultural policy and climate change"(2020.5.20.)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 ([https:// www.europarl.europa.eu/thinktank](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thinktank)).



## 국제 농업 정보(2020. 6.): 유럽

### 4 유럽연합 2030 생물다양성 전략<sup>11)</sup>

-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는 인류가 향후 10년 내 직면할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이며, 유럽연합 역시 생물다양성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.
  - 유럽연합 환경청에 따르면 동식물의 60%, 서식지의 77%가 생물다양성 보전에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해 있음.
- 유럽연합은 2020년 5월 20일 ‘2030 생물다양성 전략’을 제안하였고, 2021년 중국에서 개최될 제15차 UN 생물다양성 협약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생물다양성 전략을 글로벌 체계로 내세우고자 함.
  - 유럽연합은 2011년 생물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2020 생물다양성 전략을 채택한 바 있음. 이 전략은 다방면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가져왔으나 개선·보완할 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됨.
- 2030 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 손실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(육지 및 해양 이용 변화, 남획, 기후변화, 오염, 외래종 침투)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책무와 정책수단들을 제안하고 있음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자연보호 지역 범위 확대: 기존 Natura 2000<sup>12)</sup>을 기반으로 유럽연합 내 육지 및 해양 면적의 최소 30%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유럽 통합 자연네트워크(Trans-European Nature Network) 구축
  - 광범위한 자연복원 계획 수립: △법적 구속력 있는 자연복원 목표 설정(2021년 예정), △이전보다 보전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회원국에 요구, △농림·해양·도심 지역에서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 설정
  - 이외에도 유럽연합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를 회원국의 전략과 실행계획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으며, 전략 실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200억 유로로 추정함.
- 농업과 생물다양성 사이에는 상호연관성이 존재하는데 생물다양성은 회복탄력성, 삶의 질, 식량안보 측면에서 농업에 영향을 미치고, 농업은 남획, 오염, 투입재 사용 과다로 생물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.

11) EU 의회에서 발표한 “The EU 2030 Biodiversity Strategy”(2020.5.)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thinktank>).

12) 희귀 서식지와 희귀종을 보호하기 위해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장소를 의미함.



## 국제 농업 정보(2020. 6.): 유럽

- 조류지침과 서식지 지침에서 지정한 생태보호지역 중 40%가 농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과 공동농업정책은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.
- (조류 지침) 1979년에 야생조류와 이들의 중요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
- (서식지 지침) 조류 지침과 유사하나 1,000여 종의 희귀종과 멸종 위기종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
- 그러나 현재 공동농업정책은 농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하기 충분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. 유럽연합 감사원 역시 녹색화 조치(Greening) 중 하나인 생태초점구역 지정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음.
  - 15ha를 초과하는 경작지를 보유한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 중 최소 5%를 생태초점구역으로 지정하고, 농장 내 생물다양성 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해야 함.
- 2030 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설정한 목표들은 공동농업정책 개혁안(CAP post 2020)에서 제시한 회원국별 전략 계획 설계에 영향을 미칠 것임.
  - 2030년까지 △보호지역의 30% 이상을 농지 면적으로, △농지 중 다양성이 높은 경지 비중을 10% 이상으로, △농경지에서 유기농업에 사용되는 경지 비중을 25% 이상으로, △화학 살충제 사용량 50% 감소, △비료 사용량 20% 감소 등
- 새로운 목표들은 조건성(conditionality) 혹은 환경계획(echo-scheme)을 통해 반영될 수 있으며, 농업환경 및 기후 친화적 수단(agri-environment and climate measure) 역시 생물다양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.
  - (조건성) 면적 단위 보조금 수령과 농업인 의무를 연계시키는 것을 뜻함. 기존 공동농업정책에서 실시했던 상호의무준수와 녹색화 조치를 통합 및 단순화했음.
  - (환경계획) 기후·환경에 유익한 활동을 한 농업인에 제1축 예산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
  - (농업환경 및 기후 친화적 수단) 환경계획과 취지는 유사하나 제2축 예산을 사용하며 연간 단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을 통해 환경친화적 활동에 따른 소득 손실분을 보상함.
- 다만 △농촌개발 부문(제2축) 예산 감축, △면적별(혹은 마릿수별)로 지급되는 환경계획 보조금 체계, △입법 과정 지연은 공동농업정책을 통한 유럽연합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0.6.15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